

■ 파격적 경영쇄신안 발표 삼성의 진로

‘제3창업’ 전환점... 일단은 ‘집단경영체제’

삼성이 22일 파격적인 경영쇄신 카드를 내놓음으로써 ‘제3창업’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자 출발점에 섰다.

◇ 이 회장과 전략기획실 없는 경영체제 어떻게 되나 = 이 회장의 최근 삼성의 시종(始終)을 관통하는 중추가 사라짐을 의미한다는 게 삼성맨들의 진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룹 단위의 장기 경영비전과 계열사간 중복사업 방지, 대규모 투자 조율, 사업구조 조정, 자원 배분, 인사 등을 맡아온 전략기획실을 없애기로 한 것도 1급 황해사를 잃은 데 비유하고 있는 게 현재 삼성의 상황이다.

◇ 경영체제 변화의 외양과 내면 = 업계에서는 그동안에도 이 회장이 경영전면에 서서 칼자루를 쥐고 진두지

휘하는 장수형 오퍼링스타일인 아니었다는 점에서 외견상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경영시스템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엄존한다.

사장단협의회가 가동되지만 어느

한 무명의 인물이 의해 그룹의 의사결정과 지배력이 좌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회장의 영향력이 지금과 180도 달리 크게 약화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라는 관측이다.

◇ 경영체제 변화의 외양과 내면 = 업계에서는 그동안에도 이 회장이 경영전면에 서서 칼자루를 쥐고 진두지

휘하는 장수형 오퍼링스타일인 아니었다는 점에서 외견상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경영시스템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엄존한다.

◇ 경영체제 변화의 외양과 내면 = 업계에서는 그동안에도 이 회장이 경영전면에 서서 칼자루를 쥐고 진두지

휘하는 장수형 오퍼링스타일인 아니었다는 점에서 외견상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경영시스템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엄존한다.

◇ 경영체제 변화의 외양과 내면 = 업계에서는 그동안에도 이 회장이 경영전면에 서서 칼자루를 쥐고 진두지

휘하는 장수형 오퍼링스타일인 아니었다는 점에서 외견상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경영시스템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엄존한다.

◇ 경영체제 변화의 외양과 내면 = 업계에서는 그동안에도 이 회장이 경영전면에 서서 칼자루를 쥐고 진두지

휘하는 장수형 오퍼링스타일인 아니었다는 점에서 외견상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경영시스템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엄존한다.

◇ 경영체제 변화의 외양과 내면 = 업계에서는 그동안에도 이 회장이 경영전면에 서서 칼자루를 쥐고 진두지

휘하는 장수형 오퍼링스타일인 아니었다는 점에서 외견상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경영시스템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엄존한다.

◇ 경영체제 변화의 외양과 내면 = 업계에서는 그동안에도 이 회장이 경영전면에 서서 칼자루를 쥐고 진두지

휘하는 장수형 오퍼링스타일인 아니었다는 점에서 외견상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경영시스템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엄존한다.

◇ 경영체제 변화의 외양과 내면 = 업계에서는 그동안에도 이 회장이 경영전면에 서서 칼자루를 쥐고 진두지

휘하는 장수형 오퍼링스타일인 아니었다는 점에서 외견상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경영시스템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엄존한다.

◇ 경영체제 변화의 외양과 내면 = 업계에서는 그동안에도 이 회장이 경영전면에 서서 칼자루를 쥐고 진두지

휘하는 장수형 오퍼링스타일인 아니었다는 점에서 외견상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경영시스템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엄존한다.

◇ 경영체제 변화의 외양과 내면 = 업계에서는 그동안에도 이 회장이 경영전면에 서서 칼자루를 쥐고 진두지

휘하는 장수형 오퍼링스타일인 아니었다는 점에서 외견상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경영시스템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엄존한다.

◇ 경영체제 변화의 외양과 내면 = 업계에서는 그동안에도 이 회장이 경영전면에 서서 칼자루를 쥐고 진두지

휘하는 장수형 오퍼링스타일인 아니었다는 점에서 외견상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경영시스템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엄존한다.

◇ 경영체제 변화의 외양과 내면 = 업계에서는 그동안에도 이 회장이 경영전면에 서서 칼자루를 쥐고 진두지

휘하는 장수형 오퍼링스타일인 아니었다는 점에서 외견상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경영시스템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엄존한다.

재계 “기업경영 투명제기 환영”

기획부 “투자 활성화 ... 긍정적”

■ 경제단체·정부 반응

22일 발표된 삼성의 ‘경영쇄신안’에 재계는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경제부처들은 삼성 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영이 훨씬 투명해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식논평을 통해 “경제체는 삼성그룹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이근희 회장의 경영 일선진과 전략기획실의 폐지 등을 담고있는 삼성그룹의 쇄신안이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고뇌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경련은 “그런 만큼 이제는 삼성과 관련된 추가적 의혹이나 더 이상의 사회적 논쟁을 지양하고, 삼성이 새로운 경영체제하에서도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과 지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과거 정권이 앞세운 금산분리 정책과의 결별 수순으로 가는 마당에 삼성에 쏟아지는 은행업 진출 의혹을 차단하고 비은행 금융업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선언에 다른 대기업도 대목이다.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검 결과가 나온 뒤 삼성 측이 빨리 정리해서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삼성이 투자를 유보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도 투자계획을 확정짓지 못했는데 이번 쇄신안을 계기로 삼성그룹이 정상적인 영업 및 투자에 돌입하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이 발표한 쇄신안에 포함된 지주회사 관련 부분이 그동안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개별 기업이나 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언급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이 발표한 여러 방안들이 조속히 시행돼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이순동 사장은 소회를 묻는 기자들에게 “심정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서 “삼성사의 모든 직원들이 ‘회장님이 없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제자유구역 병원에 호텔 허용

시행령 개정안 마련 ... 국제회의장업도 가능

인천과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내에 병원을 세운 외국인이나 외국인 투자법인들은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호텔·목욕탕이나 국제회의장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경제자유구역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와 카지노 허용기준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나해 말 국회의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종전

에 외국인만 적용되던 외국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외국인 투자법인(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아울러 이들에게 부대사업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나 구체적인 부대사업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였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담긴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허용 부대사업은 ▲보양온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이다.

공정위 과징금 작년 4천235억 사상 최대

담합 과징금 3천억 돌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형 담합(카르텔)사건을 속속 적발함에 따라 담합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3천억원을 넘어섰고 전체 과징금 규모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22일 발표한 ‘2007년 사건처리 결과’에서 지난해 총 414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4천234억8천800만원으로 전년 1천752억6천500만원(250개사)의 2배를 크게 웃돌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이 3천70억원으로 전년(1천105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섰고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담합사건중에서는 10개 합성수지 업체에 1천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정유사(526억원), 제당업체(511억원), 손해보험사(508억원) 등 대형 담합사건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담합 외에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89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는 241억원이 부과됐다.

지나해 공정위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43건이 제기돼 전년(52건)보다 17.3% 줄었으며, 이중 36건이 기각됐고 4건은 일부 인용됐다.

이처럼 대형 사건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건수도 65건으로 전년(32건)의 2배를 넘었고, 소송 제기율도 3.9%에서 6.1%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기된 소송중 판결이 확정된 3건을 모두 승소했으며 나머지는 소송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나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수는 총 4천478건으로 전년(4천436건)보다 0.9% 늘었고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1천647건으로 전년 대비 59.1%나 급증했다. 반면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하도급, 가맹사업 등 여타 법률 관련 사건은 감소했다.

한국, IT강국 맞나

육선 이어 이동통신업체도 고객정보 유출 대책마련 시급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로 파이문을 일으킨 육선 사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일부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경찰과 관련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벌어진 LG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휴대전화 볼 소리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 정보를 알려주는 콘텐츠 제공업체(CP)의 고객정보가 일부 유출되면서 비롯됐다.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 내려받을 수 있는 벨소리가 달라 LG텔레콤은 CP를 통해 이를 관리했는데, CP 고객 정보 관리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 서버 주소가 한 개인에게 유출된 것.

이 개인 블로그는 콘텐츠 제공업체의 서버와 연동해 LG텔레콤 가입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가입일, 휴대전화 모델 등 3개 항목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입자의 이름은 노출이 안됐고, 370명의 피해자 가운데 199명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공개돼 피해가 적었다.

그러나 외부 사이트를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짐에 따라 업계에서는 고객 정보 인증 체계를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블로그는 고객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경찰에 신고한 뒤 3일이 지나 완전히 폐쇄됐다.



수입차도 보고 여행권도 타고...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오는 30일까지 백화점 1층 광장에서 '폭스바겐 전시 페스티벌'을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폭스바겐의 '페이톤', '이오스', '파사트' 등의 신차를 선보이고 백화점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동남아 여행권(1석), 제주도 여행권(2석) 등을 증정한다.

전국 아파트 거래건수 급증

3월중 4만6천여건 2006년 이후 최고

전국에서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달 신고건수가 2006년말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22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3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아파트거래건수는 4만6천6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06년 12월(6만4천250건) 이후 가장 많은 건수이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는 지난

해 상반기에는 3만1천~3만6천여건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11월에 4만3천340건으로 늘었다가 올 1월과 2월에는 3만6천여건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전반기와 제2분기 전월보다 감소했으며 서울(7천355건)은 56.8% 늘어났고 경기도(1만2천84건)와 인천(3천164건)도 35.5%, 37.8% 각각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강북 14가(4천203건)가 66.1% 늘어났으며 강남 3구(832건)도 56.7%나 많이 신고됐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보급자리 주택은 수도권에서 분양받는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동안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신혼부부가 임차할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혼부부용 보급자리 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연간 12만가구를 특별공급하겠다고 했던 공약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5만가구는 특별공급하고 7만가구는 기존 주택 구입·임차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가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5만가구는 임대주택 3만5천가구와 분양주택 1만5천가구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용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공급규정을 적용하지는 않고 일반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우리銀, 금리 상한 주택대출 출시

‘금리상한(Cap, 캡)’을 0%로 설정해 일정기간 대출금리가 최고 약정금리 이상 오르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될 예정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주 초 금리상한주 주택담보대출인 ‘금리안심 파워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대출은 대출금리에 상한을 설정해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대출금리는 일정 수준이상 오르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금리 하한은 설정하지 않아 CD 금리가 떨어질 경우 하락폭 만큼 대출금리도 하락하는 장점이 있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Company Name, Position, Salary/Level, Start Date, End Date, Contact Info. Includes companies like OTC, H&T, and various recruitment agencies.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